

보도시점 2024. 4. 3.(수) 14:00 배포 2024. 4. 3.(수) 09:00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 개최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을 6개월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

- 시행령 등 법률 하위규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QA, 금융권 표준양식 준비상황, 채무조정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법 시행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

* 채무조정·채권양도·채권추심·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 이용자보호기준

◆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정착되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함께 노력

- ① 금융당국은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하여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 등을 마련
- ② 금융회사는 전산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
- ③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법 시행후 발생할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긴밀하게 소통

’24.4.3일(수)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부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제정되었으며, 10.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동 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win-win)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하여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금융위는 금융권, 전문가와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TF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1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면서,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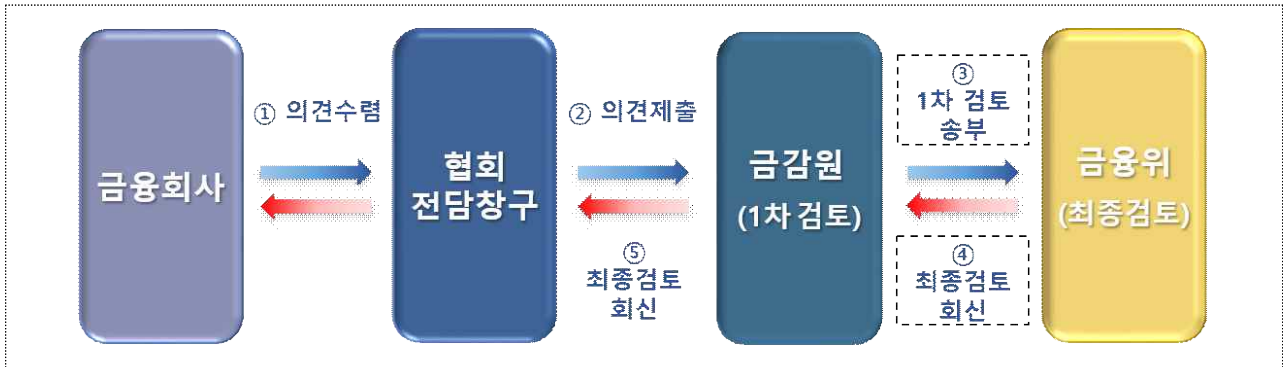
“둘째, 금융회사에서는 전산구축·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며, 모든 금융회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홍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셋째, 법 집행에 보다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금융당국-금융권간 협의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법 시행 전까지 법령 문구의 해석,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금감원-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법령 적용, 내부기준 운영 등 법령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령 안착을 위한 보완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으로 대출 전 단계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가 완성되고, 한국형 공-사(公-社)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채무자 보호의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못지 않게,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므로 법이 안착되기까지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고 하였다.

[별첨]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담당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김경문 (02-2100-261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김은성 (02-3145-8030)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책임자	국 장	홍석린 (02-3145-8270)
		담당자	팀 장	류영호 (02-3145-8288)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책임자	국 장	곽범준 (02-3145-7160)
		담당자	팀 장	이수인 (02-3145-7180)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	책임자	국 장	김충진 (02-3145-8370)
		담당자	팀 장	유상범 (02-3145-8400)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이종오 (02-3145-6770)
		담당자	팀 장	오수진 (02-3145-6775)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김은순 (02-3145-7550)
		담당자	팀 장	이성복 (02-3145-7440)

참 고

관련 협회별 책임자 · 담당자 및 연락처

협회	책임자	담당자
은행연합회	본부장 김경민 (02-3705-5050)	박영상 상생금융부장 (02-3705-5290)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 김민기 (02-2011-0711)	이경원 소비자보호부장 (02-2011-0742)
저축은행중앙회	수석상무 최병주 (02-397-8602)	조부제 법규제도부장 (02-397-8710)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천승환 (02-2262-6697)	유제상 상품지원부장 (02-2262-6624)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김지훈 (02-3702-8524)	박상조 경영지원부장 (02-3702-8571)
대부금융협회	전무이사 이재선 (02-6710-0802)	심용식 기획부장 (02-6710-0810)
신용정보협회	상무 기경민 (02-3775-2863)	최영삼 신용사업본부 부장 (02-3775-2861)
농협중앙회	본부장 장종환 (02-2080-5056)	조영철 여신관리국장 (02-2080-3660)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 조용록 (042-720-1860)	한동권 여신지원팀장 (042-720-1871)
수협중앙회	부대표 문진호 (02-2240-2150)	이옥진 상호금융본부장 (02-2240-2200)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상무 김용배 (02-3434-7123)	김경희 상호금융여신부장 (02-3434-7230)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박재경 (02-2145-9121)	이제광 여신관리1부장 (02-2145-9410)